

# “美·中갈등 세계경제 불확실성 커져… 리스크 만전을”

## 文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여야정협의체 재가동 필요성 강조  
여야 5당대표 회동, 정국 풀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넣기 위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 주장이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국무회의장에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화된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까지 더해 “정부는 대외 리스크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의 협력도 절실하다”며 “정치가 때론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바람”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개최 및 여야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대외경제의 불확실성 및 민생)의 물꼬를 틀 수 있길 바란다”며 “여야정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국민앞에 한 약속”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하지만 올 3월 개최하기로 약속한 (여야정협의체) 2차 회의는 아직 열지 못했다”며 “여야정협의체의 분기별 정례 개최는 정국

상황이 좋은 나쁜 그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가자는 뜻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여야정협의체 분기별 정례 개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속히 개최하고 정상화해서 국회 정상화와 민생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여야정협의체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여 주요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한 회의’다.

이 회의는 작년 11월5일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바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 野 불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불투명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열어  
10월 시행위해 이달까지 통과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4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위원 불참으로 파행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법 등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불참으로 정회(회의중지)했다.

행안위 법안소위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10명 중 6인 이상이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는 민주당 소속 홍익표 법안소위 위원장과 강창일·김영호·김한정·이재정 의원 등 5명만 출석했다. 한 국당 소속 박완수·유민봉·윤재욱·홍문표 의원은 “사전 합의 없이 진행된 회의”라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고, 바른미래당 간사 권은희 의원은 ‘소방 4법(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법 개정안) 일괄 심의의결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이 불참한 채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해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를 전했다.

홍익표 위원장은 “소방직 국가직화는 여러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소방관 희생이 있을 때마다 중요하게 논의됐다”며 “사건이 터지면 곧 해결 것 같은 법안이 최초 발의된 이후 20대 국회가 거의 마무리될 시점에도 법안소위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관 국가직화를 오는 10월부터 시범 시행하기 위해선 해당 법안이 법안소위를 5월 말까지 통과해야 한다.

홍 위원장은 “한국당이 협의를 안 하고 권 의원이 불참하면서 (법안의의결)

6~7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소방직 국가직화는 불투명해지고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또 권 의원을 향해 “(법안을) 의결할 생각이 있으면 회의를 다시 열겠다”며 “소위에 참석한다면 밤 12시라도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행안위 법안소위는 지난달 23일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 심의의결을 시도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합의 없이 회의를 열었다”며 소위 도중 회의장에 들어와 거세게 항의했고 불발한 바 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 자유한국당, 학교법인·교직원 지원방안 모색

정부와 학부모의 사립학교 운영 개입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치 보 수권이 학교법인과 교직원 지원을 다방면으로 모색하는 모양새다.

14일 국회 의안시스템 분석 결과, 20대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668건에 달했다. 이 중 사립학교·교사 지원 법안은 대부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나오고 있었다.

먼저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감의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자율 사립형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일반고등학교·특목고·특성화고등학교·자사고·자율형공립고등학교 등으로 구분한다. 교육감은 5



지난달 1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위원장(왼쪽)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년마다 특목고와 자사고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는데,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교육감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두고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대립각을 세우는 등 교육계 갈등이 불

특목·자사고 지정권한규정 삭제 등 국회 교육위 계류법안 668건 달해

거지고 있다. 학교는 당시 “자사고 죽이기”라며 평가 첫 단계인 ‘평가 보고서’ 제출을 거부했고,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거부 시 지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강경 대응한 바 있다. 사태가 커지자 일각에선 “교육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고 ‘교육부 책임론’도 나왔다. 교육청은 앞서 지난 3월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는 정원을 감축하거나 예산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학교를 압박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교육감의 특목고·자사고 지정 권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정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자사고는 물론 학생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석대성 기자

## 정부,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경기도 광역버스요금 200원 인상  
충북·남, 세종, 경남 등 연내 도입

전국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경기도가 버스요금을 200원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광역버스와 광역급행버스(M버스)에 대해 (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를 추진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버스 파업 관련 대책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경기도는 시내버스요금을 200원 가량 인상키로 했으며

충남과 충북, 세종, 경남 등도 올해 안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지금 상태로 계속 갈 경우 결국은 대규모 감차 운행과 배차 축소로 경기도민의 교통 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며 “불가피하게 버스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인해 경기도 요금 인상분의 20%가 서울시로 귀속되는 문제는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익금을 경기도로 반환하는 방식으로 풀기로 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광역버스와 M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뉴시스

## 노웅래 의원, R&D 투자 강화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R&D) 투자전략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노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정부의 중·장기 투자전략 실효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

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해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를 기초로 국가R&D 사업과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현행 기본계획만으로는 중·장기적 성격이 강한 국가R&D 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가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R&D 투자전략을 수립해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거시적 관점에서 기본계획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한다는 게 노 의원 지적이다. /석대성 기자

## 해수부 ‘국가어항 개발’ 지역경제 거점 육성

정부가 전국 110개 국가어항에 대한 혁신전략 마련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5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전국 110개 국가어항의 혁신전략과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국가어항을 개발·관리하는 지방청,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국가어항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의견들을 교환할 예정이다.

국가어항은 방파제와 소형선 부두(물양장) 등을 갖추고 있어 수산물이나 각종 조업도구들을 어선에 옮겨 싣고, 조업이 없을 때는 어선을 안전하게 접안시켜주는 지역 수산업 근거지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또한 최근에는 낚시, 레저보트, 어촌체험 등 다양한 해양관광을 즐기기 위해 일반인들도 즐겨 찾는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